

제 198 회 일본 전문가 세미나

주제: 북한리스크와 한일협력

강연자: 이주인 아츠시(伊集院 淳) – 일본 경제연구센터 수석연구원

일본 와세다대학 사회과학부 졸업 후, 일본경제신문사에 입사해 서울지국장을 시절을 보낸 뒤, 현재 일본 경제연구센터에서 수석연구원으로서 연구를 지속하고 있는 이주인 아츠시 선생의 “북한리스크와 한일 협력”이라는 주제의 일본 전문가 초청 세미나가 6월 7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 세미나에서는 최근 도발의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는 북한을 둘러싼 문제에 대한 강연과 강연 후의 열띤 질의응답시간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발표의 테마에서 한일협력을 강조한 이유는 한일국교정상화로부터 50년 이상이 지난 현재에도 아직까지 양국이 함께 풀어야 할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강연을 시작한 이주인선생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이 동시에 가지고 있는 문제들 중 특히 북한의 문제는 양국의 전문가들이 함께 힘을 합쳐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본 강연에서는 특히 올해 초부터 격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 후, 앞으로의 대응책에 대한 고찰이 이어졌다.

북한의 도발은 1월 6일의 4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계속되었는데, 사실 올해의 잇따른 북한의 도발은 이전부터 예상되었던 사실이었다. 북한의 36년만의 노동당 대회 개최와 미국의 대선같은 특수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북한의 일련의 도발은 내부적으로는 김정은의 체제유지, 외부적으로는 외교카드를 위한 행동으로서 충분히 예상 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연속적 도발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고, 미사일발사실험은 핵탄두소형화와 맞물려, 주변국들의 안보를 위협하는 실정이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발사실험은 몇가지 의의를 가지고 있는데, 우선 비록 북한의 미사일실험이 실패로 돌아가긴 하였지만, 작년의 실패와 비교해서, 올해의 실패에서는 이전과는 다른 약간의 기술적 진보를 보여주었다. 또한, 무수단미사일이 약 삼천킬로미터의 사정거리를 갖는다는 사실은, 광의 미군기지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며, 북한이 이미 단거리미사일에 핵을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미사일, 핵기술은 북한의 근접 국가인 한국과 일본에게 있어서는 현실적 위협으로, 한국과 일본은 북한에 의한 안보위협에 면에 있어 동일선상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북한의 내부상황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면, 올해 36년 만에 개최된 노동당 대회는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김정은을 당의 의원으로 부각시키면서 그의 카리스마를 강조하는 역할을 하였고, 정책적으로는 북한의 병진노선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통일부에 의한 올해 북한노동당대회의 분석에서는 김정은체제의 본격적 도래, 김정은의 권위 상승 등이 눈에 띄었다는 점이 언급되었고, 핵무기보유국으로서 병진노선의 추진과 군의 역할축소와 당의 역할강화 또한 주목할 점으로 명시되었다.

북한은 경제적 개혁개방면에서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김정은이 주기적인 계획경제안을 대체하기 위해 도입한 경제전략은 다소 흥미로운 점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김정은의 경제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주의적 책임관리제” 로 불리며 실제 각 현장에 일정부분 책임과 권리를 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책임을 부여하는 한편 정부 중앙으로부터의 관리도 동시에 실시되어 상당히 모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외에도 대외신용도를 높여 외국의 기술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우면서도 통제 또한 강화하고 있는 등 전체적으로 모순된 상황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개혁개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뒤따르는 영향으로 인하여 내부적으로 체제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계하는 움직임으로서, 북한이 상당한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강연의 중반에 들어서서, 이주인 선생이 작년에 직접 북한에서 경험한 내용을 중심으로 강연이 진행되었다. 선생의 북한방문은 20년 전 정치부기자시절 방문 이후 처음이었는데, 그 사이에 북한에도 많은 변화들이 있었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공항의 면세점에는 여러가지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 기준에 알맞는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평양시내의 차량 수도 현저히 늘었다는 것이 눈에 띄었다. 또, 방문 중, 북한의 “우리식 경제관리방식”, 기업책임관리제에 대한 당국의 설명도 많았다고 하였는데, 특히 농업분야에 있어서의 장점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북한의 농업에서는 종래의 집단농장체제에서 더욱 세분화된 그룹에게 작물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등의 정책을 사용해 농민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북한은 이러한 변화가 개혁이나 시장화를 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북한이 어디까지나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이에따라 중앙의 관리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북한은 농업이외에도, 국민의 신뢰를 잃은 금융시스템, 뒤쳐진 경제를 일으키기위한 과학기술 등에도 힘을 쏟고, 지방의 도시들에 관광용 시설을 확충하는 등 김정은체제에 돌입한 이후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에 있어서는, 최근 미래과학자거리라는 구역을 만들고 학생들의 과학교육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과학기술이 군사분야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기때문에 과학기술을 통해 경제적 풍족과 국가의 안보를 확보하기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또 지방도시의 관광도시화에 관해서는 이주인 선생의 북한 방문 당시, 북한당국은 김정은의 고향 이라고도 할 수 있는 원산에 스키장을 건설하고, 군용장을 터미널로 만들거나 하는 모습을 보이며 외부적으로도 이를 홍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북한의 일련의 움직임은 과거 김정일의 정책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김일성의 사망, 자연재해 그리고 소련의 붕괴 등의 위기상황에서 군을 중심으로 한 정책을 내세울 수 밖에 없었던 김정일과는 대조적으로, 김정은은 위기상황에 부상했던 군 중심의 사회에서 북한의 과거 모습을 되찾기 위해 당을 중심으로 한 체제건설을 제창하고 있다. 또한, 핵개발을 통해 안보를 확보하고 기존의 재래식무기에 들어가던 군비를 절약해, 이 돈을 경제발전에 쓴다 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데, 원산의 관광도시화 등도 이러한 논리의 선전용 예로서 사용되고 있다. 물론 핵개발에 관련한 북한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국내의 지지를 이끌어 내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만하다.

강연의 말미에는 이주인 선생은 북한리스크를 두가지 면으로 나누어 분석해 볼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납치문제, 미사일과 핵개발 문제 등과 같은 공격성의 문제와 경제문제, 식량문제 그리고 체제유지문제 등과 같은 북한의 취약성의 문제로 나누어 질 수 있다. 이는 북한리스크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며, 북한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 양쪽 모두의 관점을 취하며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어려운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북한 내부적 상황에 의한 난점과 함께 외부적으로도 북한리스크에 대응하는 각 국가간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 또한 어려운 점으로 꼽히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의 유엔의 결의안과 관련해서도 , 북한의 취약성에 주목을 하고 있는 중국과는 다르게 거리상 먼 나라인 미국은 북한의 공격성에 주목을 하고 있고, 한국은 안보문제 이외에도 북한의 갑작스러운 붕괴 등 북한의 취약성 또한 동시에 주시하고 있는 등 각 나라의 이해관계가 상이 했었기 때문에 결의안 나오는 데까지 2 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북한리스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복잡하고, 해결을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 나라들이 보조를 맞춰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이제까지의 노력이 헛수고가 될 염려가 있다. 이주인 선생은 이제는 한국과 일본이 문제해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동의 전략을 세워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한 시점에 왔기 때문에 한일이 가능한 정책들을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한다고 말하며 강연을 마무리 지었다.

#질의응답

질문: 북한의 군진노선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 핵확산의 역사를 보자면, 이미 핵기술을 취득한 국가로부터 핵프로그램을 포기하게 만든 사례가 실제로 얼마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 북한의 핵포기도 그리 간단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남아공은 스스로, 우크라이나는 NATO 수준의 안전보장을 받고서야 핵을 포기했지만 아시아의 인도와 파키스탄 등은 아직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있는데, 북한의 병진노선을 생각했을 때, 다자적인 협의체를 통해 북핵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답: 핵의 비확산의 문제는 세계적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대답하기 힘든 질문입니다. 사실상 북한이 인도나 파키스탄의 케이스를 예로 핵보유국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북한도 여러가지 상황을 보면서 진행하고 있는 문제로서, 이란이나 리비아의 케이스를 봤을 때 핵을 포기했을 때 카다르정권 처럼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핵 협상이 된 이란의 경우를 보면, 북한과 비슷한 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있는데, 유엔결의가 이란과는 달리 경제수준이 매우 낮은 북한에게 어느정도 효과를 발휘 할지도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결론은, 북한은 특이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의 사례들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확실치 않고, 북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최소한의 의견일치를 넘어, 폭넓고 강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않으면 사실적인 효과를 볼 수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코멘트: 북한과의 경제에 대해서, 한국의 연구자들의 시각은 대개 3 가지로서, 1. 북한의 계획경제의 부족한 부분을 시장경제가 보완하고 있다. 2. 북한의 계획경제시스템은 이미 무너지고 있고 시장화가 되고 있다. 3. 앞선 두 시각의 절충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당회의를 통해 어느정도 세대교체가 되면서 김정은체제의 안정성이 확보되었다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아베정부의 대북정책은 무엇인지, 또한 일본의 미사일 사정거리는 어느정도 인지 궁금합니다.

답: 사실 아베정부의 대북정책은 겉으로 표명되고 있는 것과 내부적인 입장이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대북정책의 기본은, 납치문제, 핵, 미사일문제의 세가지 조건을 해결을 전제로 한 북한과의 국교정상화 입니다. 이는 코이즈미 전 수상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김정일과 체결한 평양선언에 기초한 것으로 지금까지도 계승되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베정권은 지금까지의 아베의 행적을 본다면, 일본인납치문제에 주목한 정치인으로서 정치인커리어에 상당한 평가를 받아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납치문제에 중점을 더 둘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보수계정치가 이기 때문에 안보에 민감한 측면이 있어, 북한문제에 있어 다소 강경하게 대응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미사일과 관련해서는, 일본은 기본적으로 일본 영토를 넘어가는 공격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사일을 공격병기로서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 최근에 이주인 선생께서 북한을 방문한 시점이 안보리결의 등의 일련의 사건이 있었던 이후였는지, 그 시점이 궁금합니다.

답: 저의 북한 시찰은 작년 9 월 이기때문에 북핵실험이나 유엔결의 이전이었습니다.